

사회

과장 50·부장 100·임원 200만원씩 매달 계좌로 상납
납품 수량 부풀리고 고물업자와 공모 수익원 빼돌리기

조선소는 '비리 백화점'

전남경찰, 현대삼호중공업 임원 등 30여명 적발

원청 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받은 대형 조선소 관계자와 '뒷돈'을 건넨 협력업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이번 수사를 통해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거대 조선소와 협력사 간 '검은 거래'의 실체가 드러났다.

경찰은 또 조선소 크레인의 안전성을 좌우하는 와이어로프 구매 대금을 착복한 일당 4명을 함께 적발해 조선소와 협력사 간 '검은 거래'의 실체를 드러냈다.

경찰은 또 조선소 크레인의 안전성을 좌우하는 와이어로프 구매 대금을 착복한 일당 4명을 함께 적발해 조선소와 협력사 간 '검은 거래'의 실체를 드러냈다.

◇3년간 수익액 '뒷돈' 주고 받은 28명 검거=전남지방경찰청은 4일 선박 건조 과정에서 여태의 금품을 받은 현대삼호중공업 간부 노모(54)씨 등 조선소 2곳의 임직원 15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 조선소 임직원에게 돈을 건넨 정모(40)씨 등 협력업체

사장 13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 등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최근까지 정씨 등 협력업체 사장 13명으로부터 315차례에 걸쳐 총 3억1400만원을 받아왔던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선소는 현대삼호중공업 임직원 12명과 대한조선 임직원 3명이 포함됐다.

경찰조사 결과 협력사 사장들은 원청업체인 조선 업체 간부나 실무자들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갑(甲), 을(乙) 주종 관계-계좌로 매달 직위별 금품 상납=조선소 관계에서 조선소 임직원들은 '갑(甲), 협력사는 을(乙)로 통한다. 조선소는 공정별로 협력사를 선정할 수 있고, 공정에 참여한 협력사 직원과 공정을 관리·감독하는 우월적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청업체인 조선소가 계약을 대가로 금품이나 각종 권익을 요구할 경우 협력업체는 이를 외면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이번에 붙잡힌 현대삼호중공업과 대한조선 임직원들의 경우 매달 자신들의 통장 계좌로 돈을 상납받을 만큼 '뒷돈 거래'가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 심지어 이들은 과장급은 매달 50만원, 부장급은 100만원, 임원급은 200만원 등으로 이른바 '월정액' 처럼 금품을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금품 수수액은 3억1400만원. 하지만 이 금액은 모두 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주고받은 것으로, 현금이나 수표, 항공·접대 등을 감안하면 실제 '검은 돈'의 규모는 훨씬 클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구매액 부풀려 4억 챙긴 일당도 적발=경찰은 이날 '뒷돈' 거래에 연루된 28명 외에도 조선소 주요 부품의 구매 대금을 빼돌린 현대삼호중공업 과장 변모(42)씨와 납품업체 사장

이모(46)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 등은 김모(38)씨 등 2명과 공모해 조선소 골리앗 크레인의 주요 소모품인 와이어로프의 납품 수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지난 2007년부터 15차례에 걸쳐 4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다.

변씨 등은 이 과정에서 3년7개월간 납품되지 않은 와이어로프를 납품된 것처럼 허위 검수를 일삼았는데도 회사 측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대삼호중공업의 경우 지난 8월에도 직원들이 고물업자와 공모해 5억7000만원 상당의 철판을 빼돌리다 검거된 바 있어 조선소계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008년부터 수천여원이 투입된 현대삼호중공업의 시설 확장 과정에서 투자비 일부가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하고 임직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인터넷 도박 사이트 해킹 개인정보 판매 20대 영장

광주광산경찰은 4일 인터넷 도박 사이트 등에서 해킹한 회원정보를 전달받은 뒤 이를 판매한 노모(24)씨에 대해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해 8월 초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도박·경마·대부업체 사이트 등에서 해킹한 회원정보 600만명을 해커로부터 전달받은 뒤 개인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50만~200만원씩 받고 판매하는 등 30회에 걸쳐 4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노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개인정보 판매 게시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개인정보를 판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노씨에게 해킹한 도박 사이트 회원정보를 넘겨준 해커의 뒤를 쫓고 있다.

/이종현기자 golee@kwangju.co.kr



사랑의 연탄 나눔

광주와 전남북 및 제주도 코오롱 스포츠사장단 20여명이 4일 오후 광주보건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과 함께 광주시 북구 중흥3동 저소득가정에 사랑의 연탄을 배달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5·18 기념재단은 5월 단체와 무관" 발언 시비

윤광장 기념재단 이사장 사퇴

5월 관련단체 발언 문제로 반발을 불러온 5·18 기념재단 윤광장(68) 이사장이 4일 이사회에 사퇴의사를 밝혔다.

5·18 기념재단 이사회 7명(총원 14명)은 이날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 기념재단 사무실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어 윤 이사장의 결정을 수용하기

로 최종 결정했다. 윤 이사장 지난해 5월 15일 이사회 만장일치로 재선출됐고, 2011년 5월 초순에 임기가 끝난다. 윤 이사장은 지난해 25일부터 5·18 기념재단 사무실에서 (사)5·18 구속수상자회 소속 회원들이 찾아와 항의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보고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이사장은 지난해 9월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체육대회 인사말에서 "5·18 기념재단은 5월 관련단체와 무관한 특수법인"이라고 말해 (사)5·18 구속수상자회 등 5월 관련단체의 반발을 샀었다.

/양한기기자 yang@kwangju.co.kr

박우량 신안군수 선거법 위반 의혹

목포지청 소환 조사

박우량(55) 신안군수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4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지청장 김진수)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박 군수에 대한 소환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된 박 군수를 상대로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여부와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군수는 6·2 선거를 앞두고 업무 추진비 중 일부를 유권자들에 대한 식사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필로폰' 한국계 미국인 검거

광주남부경찰은 4일 마약을 국내에 몰래 들여와 무약한 한국계 미국인 김모(25)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일 밤 11시10분께 광주시 남구 방림동 자신의 외삼촌(50)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을 몰래 섞은 뒤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요양병원 시설 안전 문제있다

광주 광산구서 80대 치매 할머니 추락사

80대 치매환자가 병원 내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관련 병원 측의 허술한 시설 관리가 사고를 키운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오전 10시20분께 광주시 광산구 N요양병원 지하 1층 배전실에서 이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 정모(여·86)씨가 쓰러져 숨져있는 것을 간호사가 발견, 경찰에 신고

했다. 정씨는 약 5년 전부터 치매를 앓아왔으며, 약 1개월 전부터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간호사는 경찰에서 "오전에 정씨 할머니가 보이지 않아 찾아봤는데 7층 병실 옆 배전실 문이 열려 있었고, 배전실 통로 가장 아래 층인 지하 1층에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정씨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배전실에는 가로 50cm·세로 2m 크기의 배전용 구멍이 있으며 병원 측은 문을 잠가 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치매 환자인 정씨가 잠겨 있던 배전실 문을 열고 들어간 뒤 사고를 당한 것이 아냐고 보고 있다. 경찰은 잠금 장치를 해 놓은 문이 80대 노인의 힘으로도 열렸다는 사실에 주목, 병원이 잠금 장치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 등 안전 시설 관리에 대해 조사중이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김치 담그려 열무 15개 출저

○남의 발에 물레 들어가 열무를 흠쳐려낸 40~60대 여성 2명이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경찰서행.

○4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노모(여·49)씨와 김모(여·69)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에 광주시 남구 방림동 홍모(여·56)씨의 밭에서 1만원 상당의 열무 15개를 뽑아 자루에 담은 중 홍씨에게 들켰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같은 동네에 사는 선우매 사이인 이들은 평소 홍씨의 밭 주변에서 운동을 하던 중 열무를 발견하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는데, 경찰에서 "열무가 탐스럽게 생겨서 김치를 담가 먹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유제원 전 도교육위원장 집유

뇌물수수는 무죄

뇌물수수와 부당한 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제원(65) 전(前)전남도교육위원회 의장에 대해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조의연)는 4일 위장전입을 통해 농지를 구입한 혐의(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유 전 의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선 학교의 기자재 납품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특기법상 뇌물)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위원으로서 부동산 실명법을 어긴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유 전 의장이 회사의 설립부터 관여해온 H사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지분에 대한 일종의 배당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유 전 의장은 해남의 농지를 위장전입을 통해 구매하고, 도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H사가 일선 학교에 교구를 납품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대가로 4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유 전 의장은 검찰에서 "H사로부터 받은 돈은 아내가 갖고 있던 H사의 지분 40%에 대한 배당금"이라고 주장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대학편입 마무리 내년 1월 마무리 실전트레이닝!

수도권 편입대비
편입영어 Final Course

이공계,자연계 편입대비
편입수학 Final Course

전남대 편입대비
TEPS 100점 올리기 Project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062) 227-8088